

13년 끈 '복수노조'... 현장선 勞使 모두 "반대"

내년 시행 앞두고 논란

"복수 노조가 허용되면 회사가 허용 노조를 만드는 등 장난칠 가능성이 큼. 위원장님이 목숨 걸고 막아야 합니다."

한 대의원의 격한 발언에 강대 내부엔 순간 적막이 흘렀다.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도 곤혹스러워했다. 장 위원장은 "나도 목(위원장직)을 걸고 하는 심정"이라며 "노동운동 전체의 방향도 고려해야 하니 나에게 맡겨 달라"고 말했다. 9일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이 경남 창원외의 자동차 부품업체인 텐소프를 방문해 이 회사 노조 간부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복수 노조 허용문제에 대해 현장 조합 간부들은 강한 반대 입장이었다.

회사측도 복수 노조 허용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텐소프의 노무담당 상무는 "회사 내에 또 다른 노조가 생기면 대혼란이 오고 기업생산성에도 저해요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선 노조, 경영진은 복수 노조 반대
13년을 끌어온 복수 노조, 전일자 임금 문제가 하반기 노사관계의 핫이슈가 되고 있다. 노동계는 복수 노조 허용에 따른 경쟁 노조의 출현을 우려하고 경영계도 산업현장의 혼란을 걱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13년간 세 차례나 유예된 복수 노조 허용, 전일자 임금

지급 금지조항이 예정대로 시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임태희 노동부장관 내정자측도 "원칙대로 시행해야 하며, 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를 노사가 자율적으로 마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복수 노조 허용과 전일자 임금 지급 금지는 현행 노동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상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돼 있다. 이 법은 1996년 말 국회를 통과했으나 복수 노조와 전일자 임금 조항은 세 차례의 시행 유보를 거쳐 별도의 입법 조치가 없으면 내년 1월부터 발효하게 돼 있다.

두 문제 중 전일자 임금 문제는 간단하게 정리된다. 노동계는 전일자 임금 지급 허용, 사측은 전면 금지, 정부는 절충안을 내놓고 있다. 반면 복수 노조 허용 문제는 노사간에 명분과 실리를 놓고 첨예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공식적으로 "복수 노조는 허용돼야 하지만 교섭창구 단일화는 법으로 강제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다. 원칙적으로 기업 내에 설립된 여러 개의 노조가 모두 사측과의 교섭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복수 노조 허용에 따라 파업과 교섭비용이 증가할 것을 우려하는 경영계에 대한 강한 압박이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공식적 입장도 달리 현장에선 복수 노조 자체에 대한 반대 의견도 높다. 9일 한국노총 경남지역본부 방문한 장석춘 위원장에게 경남본부는 "복수 노조 허용에

반대한다"는 결의를 제출했다.

◆노총과 경영계 내부 사정은 복잡 노동계가 복수 노조 허용에 반대하는 배경은 복잡하다. 노동계에선 복수 노조가 허용되면 단계적으로 과격과 노조들이 특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합리적 노동운동 세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다. 강한 요구를 내세울수록 조합원을 확보하기가 쉬워질 것이기 때문이다. 노동계 관계자는 "단계적으론 한국노총 소속 노조가 과격과 민주노

兩노총간도 첨예한 신경전

정부 "예정대로 법 시행"

전일자 임금지급 금지는 勞 "반대" 使 "찬성" 명확

총 계열에 잠식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내부에서도 복수 노조 허용으로 핵심 대형 노조들이 약화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경영계의 내부 사정도 통일돼 있지 않다.

경총은 공식적으로 "복수 노조가 허용되더라도 교섭 창구가 단일화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이미 복수 노조 반대 입장을 굳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총의 한 관계자

복수노조에 대한 노·사·정 입장

	공식 입장	속내
경영계	조건부 찬성 "복수노조 허용시 교섭창구 단일화해야"	반대 "복수노조 허용은 산업현장에 혼란 초래할 것"(단 일부 대기업은 복수노조 찬성)
노동계	조건부 찬성 "복수노조 허용하되, 교섭창구 단일화엔 반대"	반대 "복수노조 허용은 경쟁노조의 출현으로 조직에 타격 줄 것"
정부	복수노조 허용	?

"복수 노조가 허용되면 노조의 난립으로 경영이 힘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계가 사측의 개입을 우려한다면 사용자측은 거꾸로 노조간 선명성 경쟁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게다가 노사문화의 차이로 인한 경영계 내부의 온도차도 있다. 거의 매년 파업을 겪는 현대차 등은 복수 노조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정부가 복수 노조 허용을 강하게 밀어붙여야 한다"며 "또다시 유예한다는 것은 명분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삼성·LG 등 노사관계가 안정된 기업들은 복수 노조 허용으로 "쟁지풍파"가 일어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유경준 KDI 연구위원은 "대부분의 대기업들은 연구직 노조가 생기는 것을 가장 우려한다"며 "전자산업의 경우 워낙 제품 개발의 주기가 짧아 한 달만 연구·개발이 중단돼도 국제경쟁

력이 1년 이상 후퇴하는 결과를 낳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국제 기준대로 복수 노조로 가야"

정부는 ILO(국제노동기구) 등에 여러 차례 공식적으로 복수 노조 허용을 공언한 이상 예정대로 법이 시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복수 노조 설립을 금지할 경우 한·미, 한·EU 자유 무역협정(FTA)의 마무리에도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두 협정 모두 ILO 협약에 규정된 '결사의 자유' 등 핵심적인 노동 기준의 준수를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가 복수 노조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 미국의 기업이나 노동단체 등이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 여겨 무역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노총 손종홍 사무처장은 "복수 노조 금지가 국제 기준에 어긋나기 때문에 허용해야 한다"며 "복수 노조의 교섭 창구도 노사 자율에 맡기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최현목 기자 search@chosun.com

추미애, 뒤바뀐 신세

비정규직법엔 '칼자루'잡고 與에 끝내 비협조

이번 현안엔 與협조 절실... '칼날' 쥔 처지로

"그때는 '칼자루'를 쥐었지만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칼날'을 쥐는 처지가 될 것이다."

6월 국회에서 비정규직법 유예법안의 상임위 상정을 거부하면서 처리를 무산시켰던 추미애(사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민주당)를 겨냥해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는 말이다.



이번 국회에서 한노위는 비정규직법 개정뿐만 아니라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 전일자 급여 지급 금지'라는 올 하반기 노동계의 최대 현안을 다루야 한다. 노동계의 반발을 우려해 유보해온 이 두 조치를 법대로 내년부터 시행할 경우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기존 양대 노총이 입는 타격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노동계를 자신의 지지 기반으로 여겨온 추 위원장으로서 적극적으로 상임위를 열어 한나라당측과 협상을 벌여야 하는 입장인 셈이다.

그러나 한노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의 기류는 싸늘하다. 추 위원장이 18대 국회가 시작된 이래 법안심사소위를 구성하지 않고 비정규직법 협상 때는 회의 소집을 거부하는 등 끝까지 발

목을 잡은 기억이 생생하다는 것이다. 한 의원은 "비정규직법 협상 때 유예기간 축소, 정규직 전환지원금 확충 등 할 수 있는 양보는 다 했는데 모조리 거부당했다"며 "이번에도 그때처럼 추 위원장이 법대로 하자고 할지 궁금하다"고 했다.

한노위 한나라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여야관계는 길게 보고 적절한 양보를 하면서 다음에 또 다른 것을 얻어내는 것인데 추 위원장은 이를 철저히 무시했다"고 했다.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은 문제의 두 조항을 손질할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지만 쉽게 협상 카드를 꺼내 추 위원장을 도와줄 분위기는 아니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최재혁 기자 jhchoi@chosun.com

鄭대표 만난 YS "北 무단방류 상상할수 없어"

92년 大選이야기는 안나와

김영삼(YS) 전 대통령이 11일 취임 인사차 서울 상도동 자택을 찾아온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를 만났다.

김 전 대통령은 북한의 입진강 댐 무단 방류 사건을 언급하며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일어났다. 어린이가 죽었다고 하니 가족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이복은 도저히 정상적인 사람이 판단하기 어려운 일만 한다"고 했다.

정 대표가 "북한에 대해 전 세계가 한목소리를 내는데 우리 정치권의 책임 있는 정치인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고 하자, YS는 "대북 관계는 여야의 이야기가 같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가 (야당) 의원 때는 여야 의원들이 야구도 함께했다. 무료입장을 시키니까 국민들이 무조건 야당을 지지하는 바람에 (야당) 대신 안 한다고 해서 하지 못했다"고 회고하기도 했다. 정 대표는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물을 마실 때 우물을 판 사람을 생각하라'는 말을 항상 유념하고 있다"고 했다.

정 대표는 13대 국회 때 YS가 당 대표로 있던 민주자유당에 입당, 활동하다 1992년 부친인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대선 출마를 위해 국민당을 창당하자 옮겨 부친을 도왔다. 그러나 이날 만남에선 정 명예회장이나 92년 대선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김봉기 기자 knight@chosun.com

복수(複數)노조 전일자임금 문제

복수노조란 한 사업장 내에 여러 개의 노조가 존립할 수 있도록 허용해 기존 노조에 불만이 근로자에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 노조 전일자에게 임금 지급을 금지하는 것은 사용자가 임금을 통해 노조에 지배력을 미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다. 1996년 통과된 노동법에 규정돼 있으나 3차례에 걸쳐 시행이 유예됐으며, 별도의 법 개정조치가 없으면 자동적으로 내년부터 적용된다.

수술 후에도 여전히 아프고 쓰시고... '척추수술후 증후군' 의심을

척추수술 후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고생하는 경우가 있다. 척추 질환에는 이른바 '척추수술후 증후군 (FBSS·Failed Back Surgery Syndrome)'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수술 후에도 여전히 요통이나 하지의 방사통 등의 증상이 남아있는 경우 의심해 볼 수 있다.

▶ 신경유착이 주된 원인

생각만큼 성공적인 수술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다. 수술 부위가 제발되거나 다른 척추 부위에 질환이 발생 하는 경우, 혹은 진단의 오류로 통증의 원인이 아닌 다른 부위를 수술하는 경우 등이다.

이중 척추수술후 증후군은 경막외 섬유외포 인한 경막외 신경 유착을 주된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즉 신경근에 저기질 모양의 딱딱한 유착이 발생하면 신경의 압박과 퇴행변성이 발생하는데, 유착발생은 열에 순환 방해와 영양공급을 막아 신경손상을 일으키고 신경 기능부전을 야기하기도 한다. 신경기능 부전의 경우 통증 외에도 디스크 아로, 척추인대근육 아로, 힘없는 다리 등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 경막외 내시경, 신경성형술로 원인 제거

보다 효과적인 척추수술결과를 도출해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밀한 검사가 중요하다. 검사를 위해서는 MRI, DIT(적외선 체열촬영장치), 척추 및 근골격계 초음파, 경막외 조영술 등을 시행한다. 이를 통해 신경 병변인지, 인대 병변인지를 확인해 통증 발생부위를 정확히 짚어내는 한편 원인지로에 들어가게 된다. 경막외 내시경은 경막외강 신경유착을 눈으로 확인 후 직접 유착을 제거한다.

특히 목, 허리디스크, 척추염착 등은 대표적인 난치성 질환 중 하나다. 이 경우 경막외강 신경성형술(Na-vicath or Raz catheter) 능와 방법을 이용해 경막외 신경유착을 제거하게 된다. 경막외강 신경성형술은 열드린 사체에서 천공원공 부위에 피부 마취를 한 후, 통증의 원인이 되는 곳까지 50cm 길이의 관을 넣어 이루어진다. 여기에 조영제를 주입 후 영상소속장치를 통해 염증과 부종에 의한 유착 부위를 확인하게 된다. 위치가 확인된 후에는 카테터를 이용하여 경막외강 신경유착을 제거 하고 고농도 특수시약으로 통증유발물질들을 세서하여 원인이 세서되면 신경 기능이 회복하게된다.

이 방법은 통증이 서어 없는 반면 효과가 뛰어난 것이 특징이다. 전신마취가 아닌 국소마취로 간편하게 시술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감색칭에 **백강영, FBSS** 를 감색해 보세요



www.apain.co.kr
문의 : 02. 522. 7554
서초구 3호선 교내역 14번출구, 명한빌딩 4층

잠재적이다. 단, 환자 상태에 따라 회복이 더디거나 시술 부위에 혈종과 염증이 생길 수 있으니 해당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치료해야 한다. 백강영 마취통증의학과 의원의 백병철 원장은 "디스크 수술 환자는 한번도 디스크에 걸리지 않는 사람보다 디스크에 걸릴 확률이 크다"며 "따라서 통증 부위가 새롭게 발생한 디스크인지 재발성인지, 혹은 수술 후 심폐중후유에 해당 되-지 마취통증 의학과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 경막외 내시경술의 특징

1. 15-30분 시술 후 1-2시간 안정을 취한 뒤 일반적인 일상생활로의 복귀가 가능하다.
2. 가는 내시경을 이용 원인을 제거해 정상조직의 손상이 거의 없다.
3. 적은 통증, 국소마취로 이루어진다.
4. 수술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환자에게 적합한 시술이다.
5. 시술 비용이 합리적이다.
6. 만성적인 요통환자, 디스크 요통환자, 척추관 협착증 환자 등에 게 효과적이다.
7. 수술 후 재발되었거나 통증이 남아 있는 환자에게도 가능하다.



김영삼 전 대통령(왼쪽)이 11일 취임 인사차 서울 상도동 자택을 찾아온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를 만나 차를 마시며 얘기하고 있다.

기자수첩

베를린=백강영·산업부 young100@chosun.com

獨 밀레그룹 '후손경영'이 부럽다

"가문의 규칙(rule)에 따라 자격을 입증해야만 회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이달 초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세계 최대 가전박람회인 IFA에서 만난 라인하르트 진칸(Zinkann·50) 밀레 그룹 회장의 말이다. 경쟁업체인 체보라 60~70% 비싸게 팔리는 최고급 가전제품을 만드는 밀레사는 1899년 밀레와 진 칸 가문이 창업했다.

지금까지 110년 동안 2명의 공동 창업자 후손들이 각각 자기 가문에서 한 명을 회장으로 추천하고, 두 사람이 회사를 함께 운영하는 독특한 지배구조를 갖고 있다.

그들 4대 회장인 그가 공개한 이력은 독특했다.

"1988년 BMW에서 직장생활을 시작했어요. 4년 동안 일하며 2개 헤드헌터 업체로부터 업계 최고 인재라는 추천장을 받아 92년 밀레에 입사했어요. 이후 밀레로부터 일을 배웠지요."

그가 본격 경영수업을 처음 받은 것은 7년이 경과한 99년. 2002년 6명의 심사위원들이 주관하는 최종면접을 통과한 후야 최고경영자 자리에 올랐다.

그는 "이런 엄정한 규칙은 모든 회장 후보에게 적용된다"며 "대부분에 지금까지 경영권 분쟁이 없고 51%와 49%인 두 가문의 지분도 110년 전과 똑같다"고 말했다.

후계자의 조건으로는 외국어 능력과 군 복무도 있다. "5개 국어를

구사하며 그중 3개 국어는 능숙하다"는 진칸 회장은 기업부대 장교 출신이다. 프라이부르크 졸업 후 미국 하버드대 MBA를 거쳤고 베를린기술대 기술경영학 박사학위도 받았다. 그는 "회장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리더십"이라며 "직원이 신뢰하지 않으면 일을 할 수 없다"고 했다.

한국에도 수많은 2·3세 경영자들이 있다. 그러나 이들이 경영권을 물려받기 위해 통과해야 할 내부 심사나 정해진 규칙이 있다는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다. 상당수 기업이 승계 51%와 49%인 두 가문의 지분을 받는다. 글로벌 선진기업들을 지향하는 우리 기업들도 밀레의 예를 참고하면 어떨까?

